

한국노동패널로 본 소득불평등 현황과 쟁점

전병유(한신대학교)

1. KLIPS로 본 소득 불평등 지표의 추이

□ KLIPS의 소득분배지표와 통계청조사의 소득분배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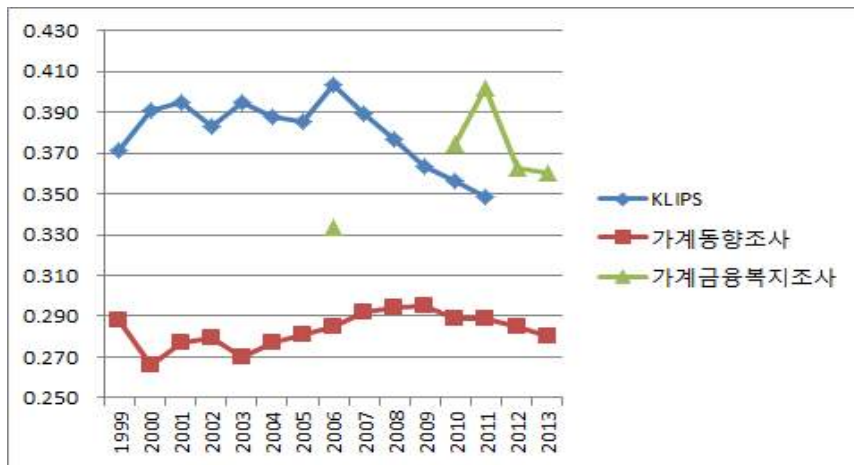
- 장연주 외(2011)와 이민환·장연주(2011) 등은 KLIPS가 표본이 무직자와 실업자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표본이 설계되어 있으며, 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런데, KLIPS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대표적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KLIPS의 지니계수값은 전반적으로 통계청 조사 자료의 지니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변화도 큰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조사가 시작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성재민(2006)에 따르면, KLIPS의 지니계수는 같은 기준으로 하더라도 통계청의 지니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KLIPS의 저소득층(5분위 중 1분위)은 통계청의 저소득층보다 더 가난하고, KLIPS의 고소득층은 통계청의 고소득층보다 더 부자이다”. 특히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 소득 5분위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 이 차이가 1998-2003년 간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KLIPS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데 기인함.
 - 이것이 소득과 표본이탈과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계층에 따른 표본탈락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다만, 2001-2003년

사이에 유사한 소득집단 내에서 소득이 낮은 쪽에 속하면 탈락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림 1]은 도시가구 2인 이상으로 제한하여 KLIPS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와 통계청의 자산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측정해본 것임.

- KLIPS의 경우 원표본에서 분가한 가구 중 다시 들어온 가구, 2009년에 추가된 표본은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 지니계수의 추이는 KLIPS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KLIPS와 통계청 조사에서의 지니계수 추이 (도시 2인 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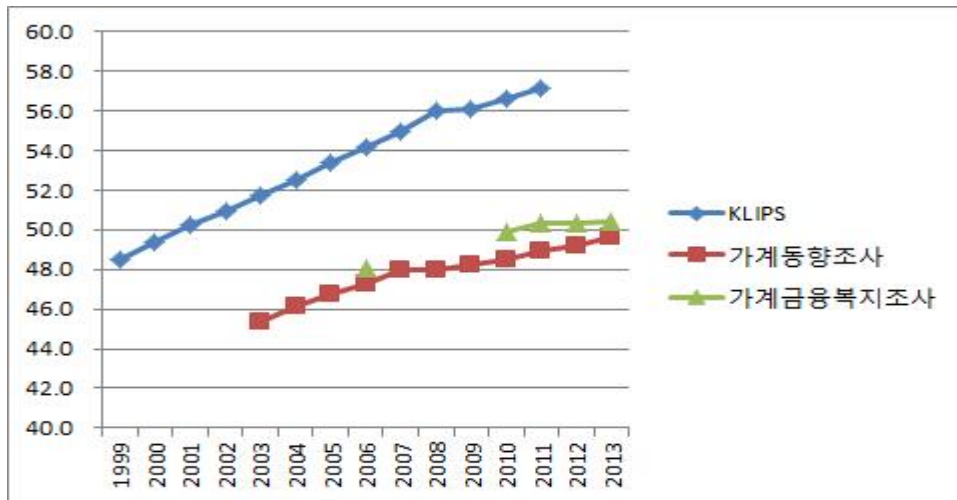
주: 1.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2, 2013년이고, 2010, 2011년은 가계금융조사, 2006년은 가계자산조사를 나타냄. 가계금융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도시가구가 아니라 전국가구 기준임. 한편 2006년 가계자산조사의 경우 이 통계 수치의 경우도 전국가구 기준이고,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경상소득 기준임.

2. 소득연간화 : 월소득을 가구별 연간소득으로 재집계
3. 소득균등화 :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눔.
4. 소득 개인화 : 소득분배지표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

○ 정의철 외(2009)은 통계청 가계조사 지니계수와 KLIPS의 지니계수의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표본의 분포나 개별 소득의 측정방법 등에서 두 조사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음.

- 특히, KLIPS의 가구주 연령이 통계청 조사의 가구주 연령보다 평균 5~6세 정도 높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통계청 조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분석기간 동안 42세에서 45세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동패널 조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분석기간 동안 48세에서 50세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그림 2]에서 보듯이, KLIPS 표본의 경우, 분가가구를 제외한 결과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연령이 2011년의 경우 57.2세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49.0, 가계금융조사 50.4와 비교해서 높은 수치임.
- 고령자 가구일수록 불평등하다는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볼 때(임병인·전승훈, 2005; 이원진, 2013), 가구표본의 고령화가 높은 지니계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KLIPS와 통계청 조사에서의 지니계수 추이 (2인 이상 기준)



- 패널자료인 KLIPS가 가구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도 여전히 초고소득층의 표본에서의 과소대표성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소득분포 지표에서 KLIPS와 통계청 가계조사와의 차이
- KLIPS의 소득분포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
 - 유경준(2007)에 의하면 KLIPS자료는 원래 조사 목적이 소득보다는 노동 관련통계 수집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 조사에 비하여 빈곤율

이 과대추정되는 등 소득수준이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측정 오차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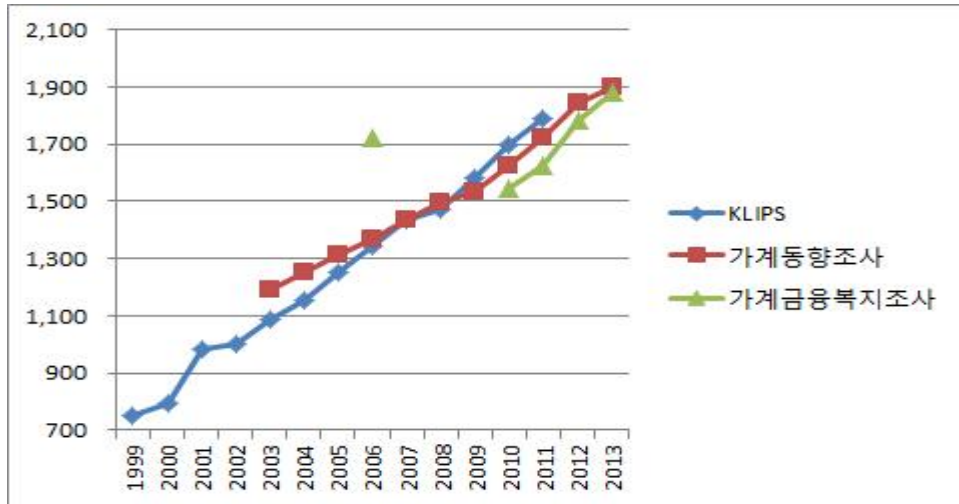
- 자영업주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묻고 임금 근로자에게는 임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질문하여 묻고 있음. 자영업주가 적자를 보는 경우 적자의 규모를 묻지 않고 있어 자영업주의 소득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KLIPS의 소득은 과소보고되고 있는가?

- 구인회(2002), 홍경준(2004, 2005) 등은 KLIPS의 소득이 과소보고되고 있고 도시가계조사의 80%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성재민(2006)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와의 격차가 좁아졌고, 오히려 KLIPS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통계청의 경우 기타소득(보험 만기나 해약이나 자산 변화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가계총소득 계산이나 소득분배지표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소득세부 항목에서는 재산소득이 통계청 조사보다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산소득의 비중이 KLIPS 5.9%(통계청이 포함시키지 않는 주식부동산 시세차익을 제외할 경우 3.7%)로 통계청 2.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통계청이 KLIPS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김재호(2009)도 자영업자의 과소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득-소비 지출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한 결과, 보고소득 대비 추정소득의 비율이 1998-2000년 사이에는 1.49-5.08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2001년-2006년은 1.3-1.5배 수준으로 기존의 추정결과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음.
- [그림 3]에서 볼 때, 균등화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을 계산해볼 경우, 2008년 이후 KLIPS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차이는 크지 것으로 판단됨.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수치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도시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농가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KLIPS와 통계청 조사에서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의 평균치
(2인 이상 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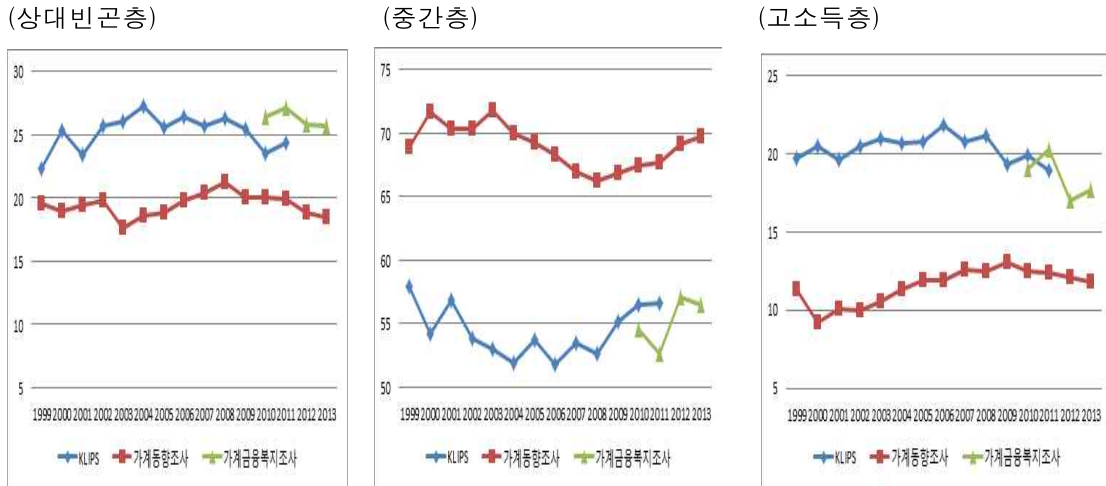
- 성재민(2006)의 지적대로, KLIPS는 국가대표통계를 지향하기보다는 같은 가구를 종단으로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간층과 상대빈곤층의 변화

-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간층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최바울·김재호(2009)도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비중이 1997년 57%에서 2006년 54%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최효미(2009)도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비중이 1997년 56.9%에서 2007년 52.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음.
 - 남준우(2007)에서도 중산층 비중(중위소득의 75-125%)은 1998년 42.3%에서 2004년에는 40.7%로 감소하였고,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은 하위 계층으로 더 많이 이동하였음.
- 다만, 위의 연구들은 2008년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이고, [그림 4]에서 볼 때, 중간층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KLIPS와 통계청조사 사이의 차이는 상대빈곤층 비율보다는 고소득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의 비율에서 더 큰 것으로 보임.

[그림 3] KLIPS와 통계청 조사에서의 상대빈곤층, 중간층, 고소득층 비중
(2인 이상 가구 기준)



주: 상대빈곤층: 중위균등화소득의 50% 이하, 중간층: 중위소득의 50-150%, 고소득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

2. 소득 불평등 변동에의 기여 요인

□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 효과

○ 근로소득보다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은 비중은 낮지만, 불평등도가 큰 것은 사실임. 다만 근로소득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불평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의철 외(2009)에서 근로소득불평등이 전체불평등의 기여도는 2004년 0.899로 압도적이고 1998년 0.837에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김진욱·정의철(2010)에서도 소득분배 변화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15차 조사 2011년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87.9%에 달함.

- 김진욱·정의철(2010)도 2002년이나 200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의 불

평등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장연주 외(2011)에서도 1-11차년도(1997-2007)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0.802로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동산의 상대적 기여도는 그 다음으로 높아 0.087로 나타났음.
- 반면 소득증가의 한계 불평등 효과는 부동산소득의 경우 큰 것으로 분석됨.
 - 장연주 외(2011)는 개별소득의 한계적 변화가 총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1% 증가는 총소득불평등도를 2.4% 완화하는 반면, 부동산소득의 경우 3.7%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정의철·김진욱(2007)에서도 1999, 2002, 2005년을 분석한 결과, 소득원천별 한계효과를 추정하여 가구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부동산 소득의 상대적 한계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음.
 - 다만, 정의철 외(2009)에서는 근로소득의 한계효과가 1999년까지는 마이너스였지만, 그 이후로는 2004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반면, 부동산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상대적 불평등, 상대적 한계효과 등을 결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부동산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1998년에 비해 2004년의 상대적 기여도는 0.026에서 0.055로, 상대적 불평등은 1.168에서 1.495로, 상대적 한계효과는 0.004에서 0.018로 증가하였음. 반면 금융소득의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음.
 - 이민환·장연주(2011)도 1-11차 자료를 지니계수 분해 방법과 가구소득 방정식으로 추정한 결과, 1997년 가구소득 격차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낮았던 부동산 소득의 기여도가 2007년에는 근로소득 다음으로 가구소득 격차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수도권 부동산소득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김진욱·정의철(2010)은 연령대별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음. 5차년도와 10차년도(2002년, 2007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소득이 총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절대적 기여도의 변화가 근로소득은

청년층(25-29세)과 중년층(45-49세)에서, 부동산소득은 고령층(60-64세)에서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연령대별로 소득불평등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공적연금 수급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 박경숙(2001)도 3차(1999년)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40-45세 중장년층의 노동조건과 사회보험 가입상황이 5-20년 후의 노후 가용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지만, 공적 연금을 고려할 경우, 가입자의 빈곤율은 87.9%에서 35.8%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그러나, 공적연금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불균등한 국민연금 급여기회로 인해 근로연령기의 소득불평등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음.
 - 최현수(2002) 역시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존재가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노년기에 증가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
- 이러한 연구들은 통계청의 가계조사 2006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김영아(2008)이나 노후소득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강성호·임병인(2009)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8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연금지급으로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됨.
 - 김성태 외(2013)는 2008-2011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소득보장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소득보전율은 저소득층에서 높고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분배개선 효과를 가지며, 소득양극화의 개선과 저소득층으로의 하향이동 방지 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는 공적연금급여 전후 소득불평등 비교를 통해 공적연금이 노인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한 실증 연구(강성호·임병인, 2009; 김경아, 2008)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이원진, 2012a: 167).
- 김성태 외(2013)는 이러한 불일치가 집단 간 불평등과 집단 내 불평등의 상대적 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저소득 가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급여산식 때문에 국민연금을 주로 수급하는 고교육/정규직 집단 내 불평등을 감소시키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불평등은 증가시킬 수 있음. 이 두 효과가 합쳐질 때 전체 소득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지만, 계층적 분절화의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집단 간 불평등과 집단 내 불평등

-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 연령, 학력, 가구내 취업자수, 계급 등으로 집단을 구분할 때, 불평등은 집단 간에서보다 집단 내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정의철·김진욱(2007)은 성, 연령, 학력, 가구내 취업자수 등으로 집단을 구성할 경우, 집단 간 불평등보다는 집단 내 불평등이 불평등 확대에 더 커다랗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김영미·한준(2007)의 경우도 KLIPS 1998-200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급을 자본가, 자영자, 상층중간, 하층중간, 하층화이트칼러, 숙련육체노동, 비숙련육체노동 등으로 구분하고, 금융위기 이후의 불평등은 계급 간 불평등보다는 계급 내 불평등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자영업계급의 내적 이질성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계급 내 불평등은 계급 내 기업규모간 불평등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 구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소득불평등

-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임.OECD(2011)도 여성 노동

의 공급 증가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반정호(2012)는 도시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하여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가 가구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그러나, 김영미·신광영(2009)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호분석한 결과, 여성노동의 공급 증가의 효과는 반드시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음. 기혼여성 내 소득불평등이 증가했으며, 남편-부인 소득 연관도 증가하여(교육적 동질혼, assortive mating), 부부소득불평등에 대한 부인소득 기여분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임.
- 이성균(2008)도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이 동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가구주 개인보다는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격차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가구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윤자영(2012)도 한국노동패널 1999-2001년과 2004-2006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저임금 남편이나 고임금 남편을 둔 아내들의 고용율은 증가하였고, 중간 임금 수준의 남편을 둔 아내의 고용율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함의는 불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고령화의 불평등 효과

- 고령화의 불평등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령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경제위기 이후 중고령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안정적인 정년이 보장된 집단, 조기은퇴 후 자영업이나 단순노무직으로 전환하는 집단, 불안정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집단 등 은퇴과정의 불평등이 커지고 중고령자의 은퇴과정이 상당히 이질적임(박경숙, 2003; 홍백의·김혜연, 2010).
 - 임병인·전승훈(2005)은 소득불평등 악화와 고착화 원인이 고령화에 있다고 보았음. 1차-6차 분석한 결과, 가구주 평균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분석하였음. 동일한 인구집단(Cohort)의 소

득불평등도를 추적함으로써 연령에 따라 집단내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는 것을 발견하였음. 또한 지니계수의 요인 분석 결과 연령집단 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소득불평등도 악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이미진 외(2007)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 이원진(2013)은 연령 증가가 불평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1939~1948년생 남성 코호트가 만 50~59세(1998년)에서 만 61~70세(2009년)로 연령이 증가할 때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음²³⁾. 분석 결과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연령 효과를 확인하였음. 특히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험소득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반면, 공적보조금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을 다소 감소시키고, 사적이전소득의 변화는 집단 간 불평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도시가계조사 분석 결과와도 일치함(홍백의와 김혜연, 2012).

○ 세대 간 불평등과 세대 내 불평등

- 신광영(2009)은 1997년과 2008년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불평등증가는 세대 간 불평등보다는 세대 내 불평등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음²⁴⁾. 그러나, 세대 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을 설명하는 요인은 1998년 12% 정도였지만, 2007년에는 3.5%로 감소하였음.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세대 내 불평등이 큰 이유는 세대와 계급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음.
-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의 근로소득을 분석 단위로 하였음. 타일지수로 불평등을 측정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세대 내 근로소득 불평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급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져서 계급불평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세대 간 불평등은 과장왜곡된 측면이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20대보다 오히려 다른 연령코호트에서 더 심각함. 불평등의 문제는 세대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음.

3. 자산불평등과 자산빈곤

23) 분석 단위는 개인이며, 모든 개인에게 가구균등화 소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24) 분석 단위는 개인의 근로소득이고 실업자는 포함시켰지만 경제활동의사를 포기한 실망실업자나 일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고령 퇴직자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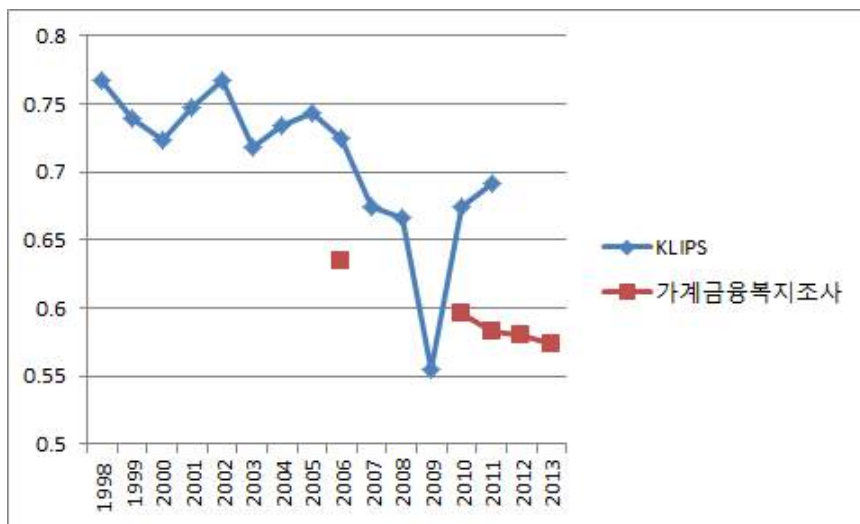
□ 자산불평등 현황과 추이

○ 자산계층별 점유율 및 분위수 배율 추이

- 최바울·김재호(2009)도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등에서는 지니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산에서도 부동산자산의 경우 지니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남상호(2008)는 1999-2006년을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자산과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731과 0.438로 나타났음.
 -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계층의 순자산 점유율이 16.7%, 상위 5%는 39.8%, 상위 10%는 54.3%임. 1999년의 경우 상위 1% 계층의 순자산의 9.7%, 상위 5%는 30.9%, 그리고 상위 10%는 46.2%이었음. 순자산이 소득 보다 집중경향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1999-2006년간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었음.

○ 다만, KLIPS를 통해서 본 자산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그림 4] KLIPS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산 지니계수 추이 (전체 가구)



○ <표 1>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자산분포는 남유럽형에 유사한 것으로 판

단됨.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자산불평등이 높은 반면, 남유럽국가들의 경우 자산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이는 남유럽국가들에서 자산이 일종의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KLIPS로 볼 경우, 자산-소득의 상관관계도 스페인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1> 자산 분포의 국제 비교

		한국 (KLIPS)	한국 (가계금융조사)	스페인	이태리	미국	스웨덴
GINI		0.69	0.57	0.56	0.61	0.84	0.89
점유율	10%	43	42	40	42	71	58
	5%	29	29	28	29	58	41
	1%	10	12	12	11	33	18
자산-소득 상관관계		0.21	0.41	0.15	-	0.50	0.27

주: 미국, 이태리, 스웨덴, 독일 자료는 Cowell et. al.(2013)에서 인용. 스페인의 자료는 Azpitarte(2010), Bover(2010)에서 인용(the Spanish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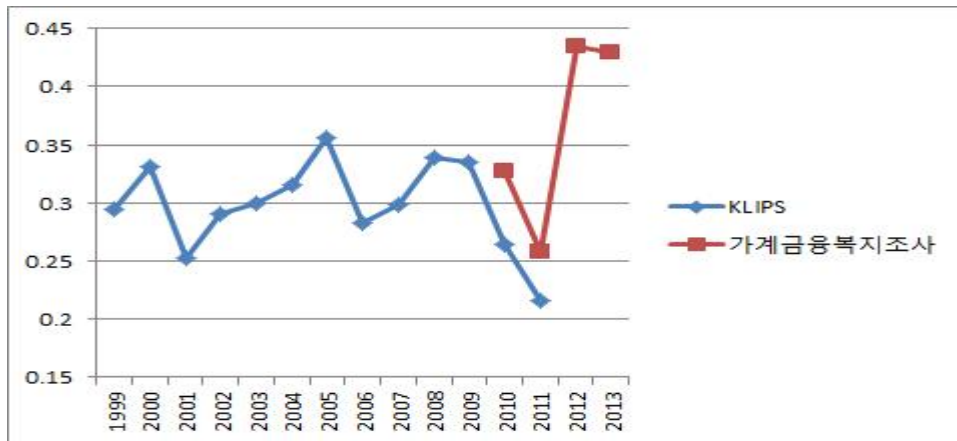
□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 소득과 자산의 결합분포나 상관관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조세정책과 재분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의 설계에 시사점을 주고, 취약한 집단을 확인하고 정책을 타게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자산은 사회보험의 대체재일 수 있기 때문임.

- 남상호(2008)는 자산-소득 상관관계가 미국(0.49)보다 약간 낮은 0.313 정도로 계산하고 있음.
- 김경아·김혜주(2009)에 따르면 자산 변동과 측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2003년-2006년간을 보면 자산-소득 상관관계는 0.25-0.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림 5]에서보면, KLIPS의 경우 자산-소득 상관관계가 최근 크게 감소한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0.4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²⁵⁾,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3.5 이하이며, 스페인은 0.15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KLIPS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산-소득 상관관계 추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순자산)



○ 소득4분위와 가계4분위의 이행 행렬

- <표 2>에서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4분위별 이행행렬에서 M(P)²⁶⁾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년의 경우 0.7953, KLIPS 2011년의 경우 0.8333으로 나오고 있음. 미국은 0.7750, 스웨덴은 0.8712임.
- 이는 소득과 자산이 동일한 분위에 위치하는 비중이 미국 33.5%, 가계금융복지조사 32.3%, KLIPS 30.0%, 스웨덴 27.7% 정도라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의 경우 소득 1분위 소득빈곤층이 자산빈곤층인 경우가 거의 50%에 달한다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47.4%, KLIPS의 경우 39.6% 수준임.

25) Budria et al.(2002)도 미국에서 소득과 자산의 상관계수는 0.6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26) Shorrocks(1978)가 제안한 이행지수 M(P)는 $(n - tr(P)) / (n - 1)$ (n=분위 수, tr(P)는 이행매트릭스의 분위 간 이동)으로 계산됨. 아무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 지수값은 0이 되고, 모두 원래의 분위에서 다른 분위로 이동할 경우 $(n / (n - 1))$ 이 됨. 두 분포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지수값은 작아질 것이고 처음 분위에서 벗어나 다른 분위로 갈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표 2> 소득과 자산 4분위 분포의 이행 행렬(Re-Ranking)

미국: 이동성 지수(M(P)=0.7705)

소득분위	순자산 분위			
	1	2	3	4
1	48.0	27.9	14.8	8.8
2	29.1	33.6	23.6	14.7
3	16.6	28.5	31.8	23.5
4	6.1	10.0	29.9	54.1

스웨덴: 이동성 지수(M(P)=0.8712)

소득분위	순자산 분위			
	1	2	3	4
1	33.1	36.1	18.2	12.6
2	28.1	28.5	24.9	18.4
3	23.9	23.1	30.5	22.5
4	14.8	12.3	26.4	46.5

한국: 이동성 지수(M(P)=0.7953)

소득분위	순자산 분위			
	1	2	3	4
1	47.4	25.2	15.9	11.6
2	32.3	31.4	21.6	14.7
3	15.4	28.9	32.3	23.4
4	4.9	14.6	30.2	50.3

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년.

한국: 이동성 지수(M(P)=0.8333)

소득분위	순자산 분위			
	1	2	3	4
1	39.6	30.3	16.3	13.9
2	25.2	29.8	26.5	18.6
3	16.1	25.1	33.5	25.3
4	14.5	15.2	23.2	47.1

자료: KLIPS, 2011년(15차 조사)

- 한편 김경아·김혜주(2009)의 경우, 라이프사이클 가설과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 자산-소득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장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고, 노년층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음.
- <표 3>에서 볼 경우, 연령대별 자산-소득 상관관계가 KLIPS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KLIPS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연령대별 자산-소득 분포

		20-34세	35-54세	55세 이상
가계 금융 복지조사	2012년	0.4332	0.4566	0.5411
	2013년	0.3750	0.4726	0.5153
KLIPS	2010년	0.5026	0.3276	0.2476
	2011년	0.3922	0.3220	0.2523

○ 자산불평등 기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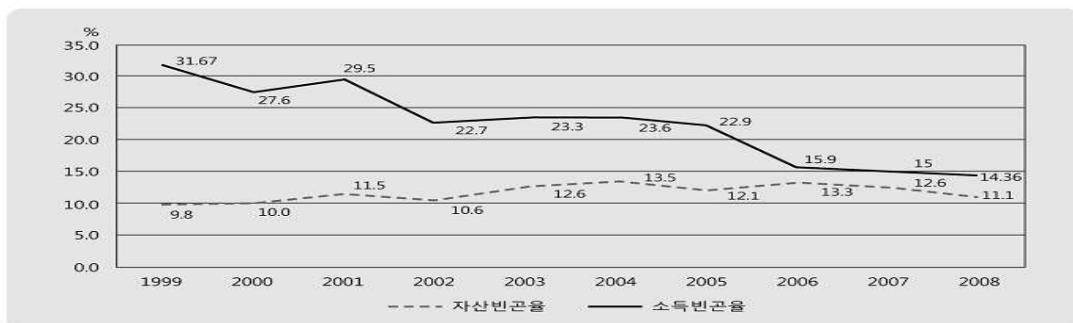
- 남상호(2008)는 자산불평등 악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부동산자산이라고 분석하였음. 부동산자산의 기여율 93%에 달하고 금융자산은 12% 정도로 나타났음.

□ 자산 빈곤

○ 1999-2006년까지는 자산빈곤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함.

- 이상은 외(2011)는 2-11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산액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자산빈곤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분배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빈곤을 순자산액이 소득빈곤선 수준의 3개월분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빈곤율은 상당한 비율로 감소하는 반면, 자산빈곤율은 증가하였음.

[그림 6] 소득빈곤율과 자산빈곤율 추이



자료: 이상은 외(2011).

- 자산빈곤선을 자산 중위값의 50%로 설정할 경우의 자산빈곤율
 - KLIPS: 1999년 27.5%(남상호, 2007b), 2005년 31.0%(강성민, 2007), 2004년 28.8%(남상호, 2007b)
 - 2000년 가구소비실태에서는 순자산 기준으로 32.4%(이태진 외)

□ 근로빈곤 연구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 중에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임. 이 주제는 이 글에서 다루기보다는 다른 기회에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음.

4. 불평등의 사회적 효과

□ 불평등과 건강

- 강영주·정광호(2012)는 불평등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윌킨슨 가설을 KLIPS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결과,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강영호 외(2004)는 1차조사(1997년) 대상자가 5차조사(2002년)에서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소득으로 계층을 이분했을 때, 하위소득계층의 사망확률은 상위계층의 사망률보다 62%나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7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관적 소득지표보다는 주관적 소득지표가 상대적으로 사망률과 관련이 높았는데, 이는 소득이 실질적인 물질적 조건의 차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불평등과 범죄

- 신관호·신동균(2007)은 소득 양극화와 재산범죄율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기적 변동에서보다는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간 차이에서 보다 강하게 관찰된다고 분석하였음.

- 변재욱 외(2013)도 하위소득의 중위소득 대비 격차의 심화는 범죄 공급을 뚜렷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참고문헌

- 강성민(2007), 노동패널을 통해 본 자산빈곤의 동태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강성호·임병인. 2009.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사회보장연구, 45(2), 55-85.
- 강영주, 정광호(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265~291.
- 강영호, 이상일, 이무송, 조민우(2004).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 :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추적결과」. 『보건행정학회지』 14(4): 1~20.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금재호, 이인실(2011). 「자영업 매출과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103~140.
- 김경아·김혜주, 2009, “라이프사이클 하에서의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분석”,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김경아. 2008. “국내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공적연금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 79-107.
- 김교성, 최영(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 김기승, 오유(2012). 「자영업 부문에 있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 30(4): 31~61.
- 김성숙(2011). 「저소득층 일인가구 및 비일인가구의 가계채무상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25~144
- 김성숙(2012). 「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 가구 특성 연구」. 『젠더와 문화』 5(1): 71-103

- 김성숙(2012). 「한국 저소득층가계의 유형과 재무상태 분석」. 『회계정보리뷰』 2012년 6월호: 149~173.
- 김성태, 김승래, 임병인(2013).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6(6): 1635~1651.
- 김성환·전용석·최바울, 2004,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김영미, 한준(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한국사회학』 41(5): 35~63.
- 김옥연, 문영기(2010). 「가계자산구조와 주택소유결정요인 분석 -보통가구와 1인가구의 비교-」. 『한국주거환경학회지』 9(1).
- 김위정, 김왕배(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6): 1~36.
- 김재호, 2009,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분석 및 탈출 요인”,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김준형, 천현숙, 김민철(2013). 「주택수요의 규모별 분포 예측」. 『국토계획』 48(2): 263~279.
- 김진욱·정의철 (2010), “도시 가구의 소득 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1), 36-60.
- 김형태(2005). 「상대적 경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15~523.
- 김환준(2013). 「장기빈곤의 개념 정의와 장기빈곤층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24(4): 135~154.
- 김희삼(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117~139.
- 남상호(2007a),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 남상호(2007b).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2007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재정학회 분과 발표논문.
- 남상호·임병인(2006), 소득·소비분배구조 추이와 양극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 남상호·권순현(2007), 우리나라의 자산분포: 한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 남상호·권순현(2008),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발표 2008년 6월 25일.
- 남상호(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 중심으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의 추이」. 『노동정책연구』 7(4): 1~24.
- 남춘호(2004).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추세 분석」. 『경제와 사회』 92: 305~350.
- 박경숙(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 141~168.
- 박능후, 배미원(2009).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151~185.
- 박진영, 문숙재(20). 「가계 재무전략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1999년과 2000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2): 85~95.
- 반정호. 2011. “가구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1호, 85-111.
- 방하남, 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백은영(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재무 구조와 저축성향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1~25
- 변재욱, 김일봉, 최봉제(2013).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 지니 및 퍼센타일 지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2): 329~366.
- 성문주(2011). 「젠더와 교육기회 불평등: 고등교육 이수기회에 나타난 젠더와 가족배경 효과」. 『젠더와 문화』 4(1): 7~42.
- 성은영, 최창규(2012).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이 전·월세 선택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7(1): 69~83.
- 성재민(2006). 「패널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노동리뷰』 2006년 3월호: 75~83.
-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 68~80.
- 성재민(2011). 「저소득자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05~126.
- 송영남(2007). 「지역간 빈곤격차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 17~38.
- 신관호·신동균(2007),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13(1), 63-122.
- 신광영(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신동균·전병유,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8(3),

77-109.

- 신동훈, 장희순(2011). 「주택가격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9(2): 103~115.
- 신진욱, 이민아(2014).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향」. 『경제와 사회』 통권(101): 151~183.
- 엄선희, 문춘걸(2010).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의 형평성:[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1): 35~61.
- 우혜경, 문옥륜, 박종혁(2009).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차이」. 『보건행정학회지』 19(2): 85~110.
- 유경준. 『소득 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2007.
- 유주희, 문춘걸(2011).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평탄화」. 『경제연구』 32(1): 1~25.
- 윤자영(2012). 외환위기 이후 기혼가구의 노동공급 변화요인, 『여성경제연구』 9(1): 99-122.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상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이동영(2005).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표 분석과 이산시간 분석」. 『사회복지정책』 23(1): 183~211.
- 이미진·김미혜·홍백의. 2007. “남성고령자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1): 1-26.
- 이민환·장연주(2011), “한국 지역별 가구소득 격차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산업혁신연구, 27(3),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 이병훈, 윤정향(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 111~140.
- 이상봉(2009).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의 부의 불평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131~1146.
- 이상은, 이은혜, 정찬미(2011).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분해」. 『보건사회연구』 31(3): 3~37.
- 이상호. 2005.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 분석: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05년 11월호: 66-80.
- 이성균, 2008,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8(4), 119-146.
- 이원진(2011). 「개인화(individualization)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5): 25~60.
- 이원진(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에 대한 탐색

- 적 분석」. 『한국사회학』 47(5): 241~275.
-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장연주, 이민환, 황한식(2011). 「한국의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지역사회연구』 19(3): 1~20.
- 정운영(2008).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81~108.
- 정의철·김진욱·하두나, 2009,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17(2), 05~28.
- 정의철·김진욱 (2007),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57-77.
- 정의철 (2009), “자가주택소유의 목시적 소득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연구”, 「부동산학연구」, 15(3), 37-50.
- 주은수, 엄태영(2008). 「도시 저소득계층의 저축실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도시연구』 9(2): 1~17.
- 지은정(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최바울·김재호, 2009,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분석 및 탈출 요인”,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최옥금(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이동에 관한 연구 : 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1): 1~42.
- 최옥금(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최현자, 김정현, 김민정(20).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19(4), 211-237 (27 pages)
- 최효미(2008).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사례」. 『노동포커스』 73~84.
- 홍백의(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홍백의, 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구』 24: 187-209.

홍경준,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K. Park and D. Shin(2010). 「How do Families Smooth Household Heads' Earnings Volatility?」 .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15 79-97.

OECD. 2011. *Devided We Stand-Why Income Inequality Keeps Rising?*